

민주신당 예비후보 정책토론회



27일 오후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후보들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학규, 유시민, 김두관, 전정배, 한명숙, 신기남, 정동영, 추미애, 이해찬(토론회 좌석순) /연합뉴스

孫 정체성·정책노선 공세 집중

참여정부 공과 싸고 親盧-非盧 후보 치열한 공방 "개혁 부족" "대통합이 개혁" 우리당 실패론 논쟁

대통합 민주신당의 예비후보 9명은 27일 서울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예비후보 정책 토론회에서 자신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꺾을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범여권 후보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손학규 후보의 정체성과 정책노선에 대해 타 후보들의 공세가 집중됐고, 참여정부 평가를 둘러싸고 친노(親盧)와 비노(非盧) 후보 간의 논쟁도 벌어졌다. 손학규 후보 견제의 선봉에는 전정배 후보가 먼저 나섰다. 전 후보는 "손 후보는 올해 초 자신에 대해 '한나라당을 지켜온 기둥이자 한나라당 자체'라고 했으며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고 지적한 뒤 "손 후보는 또 지난해 북한의 핵 실험 당시 '대북지원 중단하라고 발언했다'고 몰아붙였다. 신기남 후보도 "손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차별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고 공격했으며, 이해찬 후보는 "손 후

보가 90년대 중반 복지부장관 하면서 저출산 흐름을 막지 못하고 산아 제한 운동을 해서 지금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질타했다. 이에 맞서 손 후보는 "열린우리당이 왜 결국 문을 닫게 됐는지, 왜 이명박 후보 지지율이 60%를 넘나드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 한나라당을 넘어서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켜나갔다. 참여정부 책임론과 관련, 전정배 후보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과거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친노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고 지적한 데 이어, 추미애 후보도 "지지세력 분열로 정권을 시작했고 아직도 그 분열을 극복하지 못한 점에 모두 진지한 참회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한명숙 후보는 "참여정부 실패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젊은 정치 청산, 정경유착의 청산, 권위주의 해체, 국가균형 발전, 남북문제의 안정적 관리 등에서 성과를 이뤘으나, 소통과 민생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실패 책임론'을 놓고 신기남 후보는 정동영 후보에게 "열린우리당 실패의 하나가 개혁 정체성의 부족이며, 당 의장을 두 번이나 지낸 정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며 우리당 당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정 후보는 "신 후보는 대통합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신 후보가 끝까지 우리당을 지키겠다고 했으면 신당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한다"며 반박하고 "가장 큰 개혁은 대통합이며, 대통합 없이 한나라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친노 주자인 유시민 후보는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네거티브 대신 포지티브를 질문을 주도하면서 "짜가지 없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김두관 후보는 남해군수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통해 살아왔던 차별과 소외가 없고 계층과 지역을 넘어서는 사회를 만드는 일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는 후보 1인당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11분30초에 불과해 부동산, 비정규직, 저출산 대책, 남북관계 현안 등 정책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평가는 평가만 남겼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추 다르크' 다크호스 급부상 (추미애 전의원)

'추 다르크'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추미애 전 의원이 대통합 민주신당 경선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추 전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 직전, 탄핵의 후폭풍에 휩싸인 민주당을 구하기 위해 서울의 지역구를 뒤로 하고 광주에 내려와 '3보 1배'에 나선 바 있어 지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추 전 의원이 민주당 경선에서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추 전 의원이 17대 총선 이후 3년 동안의 정치적 공백을 가진데다 대통합 민주신당 경선에 뒤늦게 합류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추 전 의원이 대통합을 명

민주당 출신 유일한 후보 민주 출신들 폭넓은 지지 鄭·孫 캠프 연대 러브콜 분으로 민주당을 떠나 열린우리당 색채가 짙은 민주당의 경선에 뛰어든 것과 관련, '무리한 선택'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의 유일한 경선 후보인 추 전 의원은 김효석 원내대표, 이낙연 대변인 등 민주당 출신 의원들의 적극적 지지를 확보하면서 의견을 확대해가고 있다.

또한, 1인 2표제의 정치적 흡수관계 속에서 전략적 제휴의 파트너로 선두 주자들의 지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추 전 의원의 주가를 띄우고 있다. 추 전 의원이 비노(非盧) 주자인 데다 경북 출신의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정동영, 손학규 후보 측으로부터 후보 연대라는 은근한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출신 원내의 인사들의 지지로 정치적 입지가 탄탄한 편이라는 감점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가 과연 표심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조직 면에서 취약하다는 점에서 컷오프 통과도 확실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전 의원은 "한나라당에 맞서 3보 1배의 심정으로 다시 국민 앞에 섰다"며 "호남의 머느리가 호남의 영원을 담아 정권 재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방의회 있는데 왜 국회서...

자치권 침해 위한 소지...과도한 자료 요구 대민업무 차질도

■지자체 국감폐지 요구 왜 끊이지 않나

전남도와 광주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지난 수년간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를 줄곧 요구해왔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인데다, 과도한 자료 요구로 대민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엔 정부 중앙부처의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인 행정부 공무원노동조합(행공노)마저도 국회의원의 과도한 국감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국정감사가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데다, 지방의회와 행자부, 감사원 등의 감사 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의 국정감사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특히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 특정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국정감사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다한 국감자료 요구도 공무원들의 반발을 부르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다. 현행 '국회법'과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가 위원회·소위원회·국정감사반의 의결을 통해 행정부에 국감자료를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개별적으로 자료 요구서를 행정부에 보내며, 심지어 의원직인이 누락된 요구서가 날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한꺼번에 자료를 요청하면 행정부 업무에 과중한 부하가 걸리고, 결과적으로 대민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전남도 공직협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만들어 내려면 연일 밤샘근무와 휴일근무를 해야 한다"면서 "간혹 제출자료를 준비하다 과로로 쓰러지는 사례까지 나와 정기국회 자료 요구는 공무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라고 털어놓았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시 '밤거리 바꾸기' 본격화

'밝은 도시 개선 추진단' 내달까지 구성 시의회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 제정 나서

광주시가 야간경관 조성을 위해 '밝은도시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광주의 밤 거리를 바꾸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시는 또 신도심인 상무지구 내 16층 이상의 대형건축물, 조선대학교 및 금호생명 빌딩 등 지역의 대표적 건축물의 소유주와 야간경관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20여건의 사업비를 확보, 매년 2곳 이상에 야간경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도 야간경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민간참여 유도를 위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안에는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민간 건축물 소유자와의 협정 체결, 행·재정적 지원 근거, 야간경관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야간경관 우수사례 표창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광주시 김영진 건설국장은 "광주천 교량, 금남로, 대표적 대형 건물 등에 야간경관 사업을 완료하면 도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자원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개선 시범구역으로 지정, 대대적인 야간경관 개선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중 광주천 도심부에 있는 남광교, 학강교, 양림교, 금교, 서석교 등 5개 횡단교량은 각 교량별 테마를 정해 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시는 또 신도심인 상무지구 내 16층 이상의 대형건축물, 조선대학교 및 금호생명 빌딩 등 지역의 대표적 건축물의 소유주와 야간경관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20여건의 사업비를 확보, 매년 2곳 이상에 야간경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도 야간경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민간참여 유도를 위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안에는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민간 건축물 소유자와의 협정 체결, 행·재정적 지원 근거, 야간경관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야간경관 우수사례 표창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광주시 김영진 건설국장은 "광주천 교량, 금남로, 대표적 대형 건물 등에 야간경관 사업을 완료하면 도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자원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2007 Jeonnam·Jeonbuk Regional Excellent Human Resources Recruitment Fair' (2007 전남·전북지역 우수인력 채용박람회 개최). Includes details about the event, sponsors like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Korea Associ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contact information for ELITE KOREA.